"정부 예산안, '5포 예산'"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 "국민 · 민생 · 성장 · 평화 · 미래 포기
경기 악화 · 성장 잠재력 훼손 악순환 고리 빠져… 원안 통과 안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 · 민생 · 성장 · 평화 ·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위기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나라 살림 맡겨도 되는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다. 실질소득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국민 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정만 예산을 삭감한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예산은 23% 삭감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으로 평화 포기 예산"이라며 "R&D(연구 · 개발)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 왔다. 성장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깎아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정부는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 삶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아낼 것"

민주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당, 대정부 투쟁 공세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이 대표 뒤엔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이란 문구의 백드롭(배경 현수막)이 붙었다. 천막 앞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함께 했고, 당 소속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농성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이 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가 단식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참 당황스럽다"며 "체력 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원시사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표에겐 죄송하지만 국민들은 모든 분야를 다 넘어서서 뭘 할 수 있고, 뭘 바꿔낼 수 있나 하는 절망감과 절박함,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이 대표를 격려했다.

농성장을 찾은 문정복 의원이 "맨날 이 대표에게 단식을 하라고 했는데 막상한다고 하니 짠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문 의원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며 농을 주고 받기도 했다.

문 의원이 "우리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라고 하자, 이 대표는 "제 책임이 제일 크다"며 "패전의 책임은 다 패전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다. 제일 큰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맨 앞에 서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을 고리로 대정부 투쟁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열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부터 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시스

"정부, 전북 죽이기 · 새만금 죽이기 멈춰라"

민주당 소속 장수군의원들,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규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의회 의원(장정복 · 이종섭 · 최한주 · 김광훈 · 유경자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장수군청 브리핑룸을 찾은 민주당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정부, 전북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해 아무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무분별한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

안에는 당초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담겼던 총 7,389억원 중 25% 수준인 1,861억원만 반영됐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새만금 지우기' 예산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의 사업도 아니며, 민주당만의 사업도 아니다. 34년이라는 오랜 기간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써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라고 주장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새만금의 역사를 부정하고, 전북 죽이기, 새만금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새만금 SOC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장수
밀목재 생태복원 58억 확보

장수군 동촌리에 위치한 '백두대간(금남호남정맥) 밀목재'(이하 밀목재)에 국가예산 58억원이 투입되어 단절되어 있던 백두대간 산줄기가 복원된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군 재선)은 "장수군 밀목재가 산림청 2024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8억원(국비 41억원, 지방비 17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훼손되기 시작하여 경제개발과정에서 도로개설, 채석 등의 이유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 · 복원하는 사업으로, 끊긴 생태계를 복원해 산림 내 동식물의 이동 및 서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수군 밀목재는 지방도 제742호선(덕산로)이 개설되면서 백두대간 정맥에서 단절됐다. 산림 생태계가 끊기면서 찻길 동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주 등산객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안호영 의원은 2022년부터 장수군과 합심해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18일 실시된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심사에 최훈식 장수군수와 함께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한편, 장수군 밀목재 생태축 복원 사업은 2024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며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 창구 운영

도의회,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도정 · 교육행정 전반 위법 등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오는 11월 제405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안 내용은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 ·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 ·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제외된다.

제안 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열린의회-행정사무감사 제안), 방문, 우편(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이메일(k200204@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안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접수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기후위기 심각… 한파도 대비 필요"

김이재 도의원,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뿐만 아니라 한파에도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도는 현재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통해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파에 대한 예방이나 지원 조항이 없어 한파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한파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수립,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파쉼터 등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직 · 간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이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태풍, 폭우, 폭염, 한파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 대상이 아닌 이상 각종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